

목어

지역감정 없애기

지역감정의 망령이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도하 신문은 연일 이를 대서특필하여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감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다. 필자도 정부에서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정책을 놓고 나라보다는 자기 지역을 우선 생각하는 정치인과 여론 주도층을 보면서 속으로 한탄한 적이 있다.

지역감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회학에서 말하는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과정 형성 이론이 대단히 유효한 것 같다. 이 이론에 의하면 불 또는 몇몇의 주체들이 열심히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적어도 제 3자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평지풍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고, 급기야 집단적 분노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또 차별을 실제로 한 지방에서는 피해의식을 호소하는 지역이 무서워서 점점 꺼리꺼리 모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간의 갈등이 마치 패거리 싸움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야말로 지역감정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던 측에서는 그 지방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만들었고, 또 오랫동안 권력자를 배출했던 지방에서는 아무리 인사와 처우가 불공평하느니 어찌나 해도 이제 겨우 2년인데, 5년째 어제의 대통령제 아래에서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이제는 모두 활활 벗어 던지고 잊어버려야 한다. 먼저 언론부터 어느 정치인이 무슨 발언을 했다고 야단스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 다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 조그만 집회에서 저질러진 발언을 했다고 해서 몇 명이나 들었겠는가. 지역감정으로 가장 큰 득을 본 정치인들부터 무슨 피해자인양 하는 작태를 중지해야 한다. 지역감정을 없애겠다는 정치인의 말씀이나 시민운동도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 또 다시 집착을 낳는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지역 감정을 없애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요사이의 유행어처럼 (고향이 어디인지) '듣지 마'가 제일의 방책일 수 있다. 대응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문화재 관료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관람의도 있을때 받아야” “문화재 구역내 징수당연”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을 주제로 열린 7일 열린 토론회의 장점은 문화재 관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또 합동징수나 분리징수나 방법의 문제로 모아진다.

문화재 관람 범위

관람 범위는 관람료 징수의 부담성을 가르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상훈 변호사는 “관람자란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실제로 보았는지 여부를 떠나 최소한 관람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지호 과장은 “사찰에는 국보 보물 지방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뿐만 아니라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들이 많다. 공원입장객들이 사찰경내의 문화재를 볼 의도가 없더라도 이를 둘러싼 자연환경, 문화재보호환경에 대해서도 볼 의도가 없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관람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관람료징수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관람 행위의 범위를 이 변호사는 관람료의 의도가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류 과장은 문화재 구역에 들어서는 것으로 이미 문화재를 관람하는 행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홍사 법주사 해인사 백양사 화양사 내장사 등은 사적 또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징수 방법

참여연대는 문화재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관람하는 사람에게는 징수토록 해야 하며, 따라서 사찰 입구에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해 분리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계종은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해 관람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원입장료를 받고, 이제 와서 관람료를 받는 우리



7일 열린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 토론회. 징수 방법의 문제보다 징수 및 집행에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에게 나가라고 하는 꼴”이라며 “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관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과장은 또 분리징수를 하면 매표의 번거로움을 가져와 또다른 민원과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며 분리징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재철 녹색연합 백두대간팀장은 징수 방법의 문제보다는 징수 및 입장료·관람료의 집행 주제를 현행의 공원공단·사찰에서 중앙정부로 넘기는 방법을 제시했다.

국립공원 내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의 유지 보수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관람료는 전적으로 국고에 귀속되어 순수하게 해당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입장료도 “국립공원의 훼손을 방

지고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입장료는 의미가 있다”며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에 소요되는 목적의 공원입장료 징수는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부장은 “합동징수에 따른 민원이 많았으며, 소송은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해 당장은 아니지만 징수 방법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의 토론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계기가 주어진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종단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연환경과 문화재 그리고 국민여가생활이나 전통문화교육 등의 정책수립에 관해서 종단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관람료 징수 왜 문제됐나

사용내역 오해에서 비롯 “문화재 보수 비용으로”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을 준비중인 참여연대는 관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느냐는 민원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신문의 독자투고 등을 통해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항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관람료 사용 내역에 대한 의문이 관람료 징수 문제 제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일보와 한술염닷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징수를 반대 하는 응답자 가운데 문화재관람료의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44.3%로

가장 많았다. 국민들은 징수 방법의 문제보다 사용 내역의 투명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의해 엄청난 관람료 수입이 사찰로 들어간다는 오해 또한 문제를 확대시켰다.

조계종은 사용 내역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관람료 징수액과 사용처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후 관람료 사용 내역의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98년의 경우 관람료 수입(86억2천만원)보다 문화재 보수를 위한 지출(136억6천만원)이 더 많았으며, 문화재의 유지 보수를 위한 조계종의 노력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문화재관람료를 공원입장료보다 먼저 징수했다며, 통합징수를 반대하기에 앞서 공원입장료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는 62년 해인사에서 최초로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65개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공원입장료는 74년부터 받기 시작했다.

◆기사 넘쳐 '선과 21세기' 한주 쉽니다.

불교TV 어디로 가나

이사회 두차례 무산 주사장 출근조차 안해 “조직 축소 지출 억제뿐”

경영년에 놓인 불교TV가 두 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되는 등 이사회마저 무관심을 표출시키면서 파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주양자 사장마저 국회의원직 승계로 출근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직 상태나 다름없다. 불교TV는 2월 20일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수덕 부사장을 제외하곤 단 한명의 이사회도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어 2일 재소집된 이사회도 성원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는 주시감자와 사의 표명을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주사장에 대해 반기를 든 신허스님을 비롯한 이사들의 불만이 겹으로 불거져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뚜렷한 처방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들의 책임회피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주사장이 법적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며 경영난 타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사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이수덕 부사장은 직원회의에서 “불교TV를 살릴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조직을 축소시켜 지출을 억제해야 된다”며 “다른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회사를 떠나도 좋다”고 밝혀 불교TV 경영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음을 시사했다.

민약 주양자 사장의 사퇴 이후 실질적인 투자자와 경영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표류한다면 최악의 상태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opia.com)

“승가대 김포학사 총체적 부실 추가공사비 80여억 감액 타당”

김포학사 대책특위 합동조사 발표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합동조사반의 9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관리감독 소홀, 부실시공, 부실감리, 2중 계약, 공사비 과다책정 등 총체적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만도 무려 80억7천4백95만원에 이르고 있어, 삼보장제가 유실될 뻔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특히 설비공사, 진입도로, 상수관로공사, 계약변경요청, 하수관화장공사 계약금지금, 설계변경 내역 등의 서류에 총장 및 이사장 결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기간자나 주임 등 실무자에서 임의로 처리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포착됐다.

특히 공사비의 경우 김포학사 이전사업과 관련된 당초 예산이 약 300억원이었으나 현재 시공사가 요구한 수용할 경우 400억원을 넘고 있으며, 이전까지 포함하면 초기예산의 40%를 상회하는 43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 설계나 하도급 공사계약에 명시돼 있는 공사들이 ‘본공사의 발도발주’라는 2중계약 때문이며, 설계감리비의 경우 업계의 관행과 달리 2배에 달하는 지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가연동변경계약’이 총공사비의 20%에 이르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사 감독관이 초창기 7개월간 파견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정상 중요한 시점인 98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18개월간 감독관없이 감리업체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포학사 대책특위는 또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의 관리부재로 설계 및 계약변경등 승인이 경솔하게 처리돼 추가 공사비의 발생원인이 됐다는 점에서도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단은 김포학사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도로설계의 경우 별도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를 지출하는 등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에따라 조사반은 시공사가 요청한 359억8천여만원중 추가된 공사비 80억7천여만원을 감액하고 279억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opia.com)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웅종 창종 제 20주년 기념 및 나라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敎界 大德은스님과 四部大衆 十方諸位께 불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대한불교 원웅종에서는 창종 제20주년 기념 및 나라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敎界 大德은스님과 四部大衆께서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수회 동참하셔서 법회의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4년 3월 일

- ◆ 일시 : 불기 2544년 3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호텔 캐피탈 대연회장
◆ 전화 : 종무원 02)857-5094

회 주 : 영산 일공
고문 : 최법신, 황법운, 정선명, 송보인, 현천호, 박호계

◆ 봉행위원 ◆

- 봉행위원장 : 최법륜
· 봉행부위원장 : 박대월, 김선진
· 봉행위원 :
체관, 체승, 보광, 대천, 체원, 체도, 체성, 체인, 오암, 명문, 성문, 추광, 광명, 진운, 도선, 보운, 성욱, 혜천, 선재, 무량, 해운, 체덕, 김삼매화, 구정연화

◆ 추진위원 ◆

- 추진위원장 : 조성관
· 추진부위원장 : 김인관, 조성견
· 추진위원 :
체의, 정광, 혜림, 천호, 무송, 지관, 성도, 해공, 선덕, 진연, 명허, 체두, 선혜, 혜정, 체선, 체혜, 체훈, 체명, 체정, 진담, 진여, 체초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웅종 총무원장 최 법 률 합장